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 본격 추진

‘유입 → 지역 정착 → 사회통합’ 원스톱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개소...유관기관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비롯해 전북자치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 추진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내에서 취업해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도 문을 열고 가동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3일 김관영 도지사과 전북자치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고용노동부 오기환 외국인력담당관, 황정호 전주지청장, 임은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신용순 전

북노무사회장, 이인형 전북지방행정사회장, 오현권 전북은행영업본부 부행장,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 거점기관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전주상공회의소 6층에 정식 개소됐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설치된 이 지원센터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21개 지자체가 신청,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9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체류지원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지원 △전북사랑 웰컴키트 제공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북자치도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된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날 개소식과 함께 전북자치도와 전북경찰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노무사회·전북지방행정사회, 전북은행 등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공동 선언을 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서비스, 전북은행은 외국인 금융 상담 및 통역지원,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노무사회·전북지

방행정사회는 전문분야 상담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도는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유입→지역 정착→사회통합 원스톱 지원’을 통한 특별자치도민화(化)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 11개 실행과제, 3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을 중점 추진하여 매년 도내 외국인 주민 10%를 유입해 2033년까지 전북도민의 10%(인 18만5,000여명)의 외국인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체계적 데이터 기반 외국인 지원 및 정책 협력 강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 △안정적인 지역정착 추진, △내 외국인 함께하는 사회통합이다.

이 가운데 18만5,000 고령인돌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운영, △한국어교육 1반지 실현, △1시간 1주민센터 설치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민의 외국인 유입·정착·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며, “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들의 정착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며, “도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삶 개선에 기여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일 (재)전북연구원에서 시·군 복지부서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道, ‘은둔형 외톨이’ 첫 실태조사

전북연구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지원방안 마련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재)전북연구원에서 시·군 복지부서 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자 이종섭 선임연구원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유형에 은둔형 청년이 포함되는 등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 기초통계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도에서는 전북연구원에 의뢰, 연구용역비 4,400만원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5일까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재)전북연구원에서 실시하며, 시·군 협조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취약 청년 전담 시범사업과도 연계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 요청 창구 마련,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장석 전북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시·군 및 읍·면 등 지역사회 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및 지역단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이들이 설문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기반으로 은둔과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전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김관영 도지사과 김이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황정호 전주지청장, 임은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미나

유관기관 관계자 30 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 고용노동부 전주·군산 고용노동지청, 도 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지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안착 및 기업유치 확대와 시범적인 고용지원 기관 운영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밀그룹을 그려내기 위해 추진한 성과물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고용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에서 나온 기본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만금 고용특구의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표는 두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 원장이 맡아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계획 수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위원, 이두희 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창훈 충청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린 토론을 벌였다.

주무현 원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동향과 전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인력수급 대책,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안)과 주요과제 등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력수급 대책에 대해 △중장기 생산인력 수급을 위해 인력 양성체계 구축, △저숙련·저임금 제조 단종지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활용 △인력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 전

달체계를 제시했다.

기본방향은 △산업(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고용서비스(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효율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가칭 새만금 일자리센터), △외국인력 활용방안과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센터 구축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주요과제로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례 제정, 거버넌스 구축, 새만금 일자리센터 모델 수립 등도 제시했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전략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지역대학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제안했고, 윤창훈 교수는 ‘새만금 고용특구 중장기 인력자원 수급계획’ 필요성을 제안했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세미나에 나온 의견과 토론내용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 반영하겠으며, 새만금 사업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지원과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탄력’

복지부 평가, 남원·군산의료원 높은 평가받아 국비 25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에 탄력을 받았다.

전북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군산의료원 12억원, 남원의료원 12억5,000만원 등 국비 총 25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운영,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 차등 지원한 것이다.

평가는 지방의료원 35개소를 병상 규모에 따라 3개 그룹화해 그룹별 4개 등급으로 차등 지원하며, 평가 항목은 혁신계획 타당성(40점), 혁신 의지(30점), 지원 효과성(30점)으로 구성됐다.

실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방의료원의 자체 혁신 의지, 즉 필수요리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지

자체정의 지원 의지인데, 전북자치도와 군산·남원의료원은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부 분석이다.

군산의료원은 수도권 의료원과 경쟁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전국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1그룹(300병상 이상, 8개소) 내에서 ‘B등급’을 획득했다.

남원의료원은 2그룹(200~299병상, 18개소) 내에서 ‘A등급’을 획득해 동일 그룹내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군산의료원은 24억원(국비 12, 도비 12), 남원의료원은 25억원(국비 12.5, 도비 12.5)을 지원받게 되었다.

전북자치도는 군산·남원의료원 스스로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 지구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대상 2000명 최종 선정

최대 6개월 3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 2,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취업난으로 구직이 힘든 미취업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18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이며, 신청자 모집 결과 모집인원 2,000명 대비 136%인 2,719명이 신청해 평균 1대 1.36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자치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 항목(중위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에 대해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중복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2,000명을 선정했다.

선발된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83.2%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기간 2년 미만인 청년이 56.2%로 최기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당은 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매월 초 지급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온라인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카드발급 및 사용방법, 활동보고서 작성 등을 안내받고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또한, 취·창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상담, 면접 전략 등 구직역량강화교육을 받게 되며,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간속(매출발생)시 취·창업 성공금 5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취업활동을 이어가는 도내 구직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가정의 달 맞아 22일까지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까지 ‘전북 고향사랑기부기부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전북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방법은 이벤트 기간 중 고향사랑기부금 사이트 또는 N포털에 방문해 전북자치도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인원은 총 20명이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오는 23일 전북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onbukstar)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상반기 운영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 상반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운영 조례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각 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가 추진하는 정밀안전 점검과 시기·계절별 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해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점검 결과 추진 상황과 올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계획

/이만호 기자